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7주년 및 조화사회연구소 개소 기념세미나

자본주의 5.0: 의료와 복지의 나눔테크놀러지



- 일시 : 2013년 10월 10일(목) 14:00~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최 :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7주년 및 조화사회연구소 개소 기념세미나

자본주의 5.0: 의료와 복지의 나눔테크놀러지



- 일시 : 2013년 10월 10일(목) 14:00~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최 :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 일정 |

사회 : 이원덕 고문 (삼성경제연구소, 전 노동연구원 원장)

개회식 14:00~14:30	개회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제1부 발제 14:30~16:00	1. 자본주의 5.0: 나눔테크놀러지 발제: 김원식 교수 (건국대, 경제학) 2. 자본주의 5.0: 의료 발제: 박종훈 교수 (고려대, 의학) 3. 자본주의 5.0: 보건 발제: 신의철 교수 (가톨릭대, 보건학) 4. 자본주의 5.0: 복지와 연금 발제: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휴 식 16:00~16:15	
제2부 Round Table 16:15~17:30	토론 김태일 교수 (고려대) 안주엽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식 교수 (연세대) 전기홍 교수 (아주대 예방의학) 최병호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폐회 17:30	

| 목 차 |

자본주의 5.0: 의료와 복지의 나눔테크놀러지

개회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07
------------------------	----

자본주의 5.0: 나눔테크놀러지

발제: 김원식 교수 (건국대, 경제학)	09
-----------------------------	----

자본주의 5.0: 의료

발제: 박종훈 교수 (고려대, 의학)	33
----------------------------	----

자본주의 5.0: 보건

발제: 신의철 교수 (가톨릭대, 보건학)	41
------------------------------	----

자본주의 5.0: 복지와 연금

발제: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45
--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가을이 완연합니다. 결실의 계절이라 무척 바쁘실 텐데도 오늘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조화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자본주의 5.0: 의료와 복지의 나눔테크놀로지’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세미나를 계획하고 발제까지 맡아주신 김원식 조화사회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박종훈 교수님, 신의철 교수님, 최균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님과 토론에 참여하시는 김태일 교수님, 안주엽 박사님, 이규식 교수님, 전기홍 교수님, 최병호 원장님, 현진권 소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7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해 연구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한선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분야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화사회연구소는 우리사회의 인구문제와 양극화에서 유발된 복지와 의료 및 주택 등 사회문제를 비롯하여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사회보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각 과제별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정책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는 200여년이 좀 넘는 역사에서 사유재산제와 경제활동의 자유에 힘입어 이윤창출과 자본축적을 이루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또 이를 고치기 위한 시도도 많았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경제윤리에 기초한 나눔의 실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과 재분배 부문에서 무

수한 나눔(sharing)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의 확대 특히 빈곤과 궁핍, 양극화 문제 등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정보화 격차와 세계화 부문과 비 세계화 부문 간의 격차가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빈곤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시민,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그 못지않게 부작용도 있었고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기부의 경우만 봐도 주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받는 자는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호간에 합리성, 진실, 그리고 책임이 결여되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양극화와 빈곤 문제에 더하여 복지문제까지 겹쳐지자 문제는 복잡해지고 풀어가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포퓰리즘이 가세하면서 문제는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연금 문제도 그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는 재정여건 등 실현가능성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간의 길고 짧음이 있겠지만 풀리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컨센서스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와 정책, 민간의 역할 등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되면 어려운 문제도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도의 하나입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안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오늘 이 세미나가 나눔에 대한 방법을 개발하는 단초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나누는 자나 나눔을 받는 자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자본주의의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시대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자본주의 5.0 : 나눔테크놀로지_총론

김원식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목차〉

- I. 서론
- II. 자본주의 4.0의 현황: 양극화와 저성장
- III. 자본주의 5.0의 개념
- IV. 자본주의 4.0의 현황과 한계
- V. 자본주의 5.0(나눔테크놀로지)의 방향: 복지와 생산의 일체화
- VI. 결론

□ 우리사회는 ‘성장과 복지’간의 갈등으로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을 빚고 있음.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 신질서(new normal)라는 문제로 보편화된 것임. 즉, 1990년대 세계 양극화 체제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의 독주는 실질적으로 양극화와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신질서로 포장해 왔음.

□ A. Kaletsky(2009, 자본주의 4.0)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자유방임 자본주의 (자본주의 1.0)의 위기를 사회주의 정책을 포용한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2.0),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3.0), 정부와 민간의 협력 (자본주의 4.0) 등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음. 그러나 글로벌 환경은 오히려 잦은 금융위기와 정부의 파산으로 양극화나 저성장이 더 심화되었음.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및 민영화 등을 통한 자본주의 4.0은 더 이상 현재의 자본주의를 정상적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더 진화된 자본주의가 탄생되어야 하고 이를 ‘자본주의5.0: 나눔테크놀로지’라고 함.

□ 최근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단기적으로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사회적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자본주의의 지속성을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 사회적 합의에 의한 나눔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인간의 양심이나 이타심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즉, 나눔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눔테크놀러지를 발전시켜야 하고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5.0의 방향이라고 봄.

□ 나눔은 크게 생산과정에서의 나눔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나눔으로 나눌 수 있음. 그러나 치열해지는 경쟁체제에서 생존 지상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생산과정에서의 나눔은 더 양극화되어 중산층의 붕괴를 낳음. 이를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해결하려 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의 정부개입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사회의존도를 높이고 이들을 세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음.

□ 예를 들면, 생산과정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위원회, 비정규직 보호, 일자리 나누기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서로 일관적이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의료보장, 무상보육, 등 재분배정책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으나 비용을 부담하는 고소득층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저소득층의 실태는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면서 혜택에 만족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혜택을 고소득층에게 기회를 박탈당한 권리라고 생각함.

□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나눔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기회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추구해야 함. 후자는 기업에게 새로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기회가 될 것임.

□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를 정부는 총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임.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분야별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예를들면, 의료, 보건, 복지, 노동, 사회보험, 국가간, 남북한간 나눔테크놀러지가 개발되어야 함. 즉, 분야별로 양극화의 미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양극화나 저성장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고, 글로벌사회의 미야로 전락할 수 있음.

□ 기업에게 근로자층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복지 등을 통하여 생산부문의 양극화를

해소함. 정부는 소득재분배에 있어서 니즈에 따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부의 재정을 절감하고 전자, 정보, 로봇, 등 모든 신기술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높은 생산성과 사회적 소양을 갖춘 인력을 기업에 공급해야 함.

□ 사회보장 및 복지 서비스는 금융, 교육, 의료 등 관련 산업의 발전 없이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음.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가 무한 공급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져 병목현상 및 질적 저하를 낳음.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로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I. 서론

자본주의와 자본의 진화

- 실물자본 (Physical capital)
 - 저축, 자산형성, 소득양극화 등
- 인적자본 (Human capital)
 - 교육, 기술, 지적재산권, 인성, 창의성 등
-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 규범, 법질서, 사회안전망 등
- 환경자본 (environmental capital)
 - 탄소배출권 등
- 조화(통합)자본
 - 행복지수(well being index, OECD) 등

➡ 자본주의가 스스로 “삶의 질”을 개척하고 있음: 홀로서기

자본주의의 과제: 성장과 분배

- 성장을 위하여 자본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실물 vs 인적자원 vs 사회 vs 환경
- 형평성을 위하여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 1차적 배분을 할 것인가?
 - 2차적 배분을 할 것인가?
 - 1차적 배분에 기초한 2차적 배분의 필요성
- “천민자본주의의 이기심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 “공생(나눔)자본주의”로
- 실물GDP 에서 행복GDP: 실물나눔에서 행복나눔으로
- 자본주의의 분배능력 향상이 자본주의의 미래

분배경제와 복지

- 복지의 진화
 - 빈곤의 해결을 위한 빈곤박멸 (poverty eradication)
 - 빈곤의 함정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 (social solidarity)
 -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융화 (social inclusion)
- 우리나라 복지수요의 변화
 - 빈곤의 탈출 (절대적 생존: 1970년대 말까지)
 - 빈곤의 탈출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으로 (양적 확대; 1980년대 말까지)
 - 4대 사회보험 등의 도입
 - 국민생활의 안정에서 복지서비스의 증대로 (2000년대 말까지)
 - 복지 서비스(시설 인프라)의 질적 개선
 - 복지서비스의 증대에서 복지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2010년대 이후의 과제)
 - 복지수요는 세계적
 - 복지상품의 기술집약화: 간병인 vs 로봇 혹은 컴퓨터
 - 복지 기술 및 서비스 능력의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와 세계 진출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자본주의의 위기 (New normal)

- 양극화
 - 1차와 2차 배분 기술의 개선
- 저성장
 - 배분 효율화를 통한 잉여자본의 활용 필요성
- 기회(catch-up)의 상실
 - 복지정책의 내실화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II. 자본주의 4.0의 현황: 양극화와 저성장

자본주의 4.0 (A. Kaletsky)

- 자본주의 1.0
 -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 자본주의 (1776-1930)
- 자본주의 2.0
 - 케인지안의 뉴딜 사회자본주의 혹은 수정자본주의 (1930s-1970s)
- 자본주의 3.0
 - 영국 대처수상과 미국 레건대통령의 신자본주의 혹은 시장기본주의 (1980s-2000s)
- 자본주의 4.0
 - 정부와 시장의 협력 (2010-)
 - 정부재정의 한계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민영화

자본주의 4.0 (A. Kaletsky)의 끝

- 격차문제의 미해결
 - 격차문제가 '지속적 경제성장' 우선에 매몰
- 정부와 시장간 협력의 부작용
 - 정부와 기업의 밀착 초래
 - 정부의 자연적 독점시장이 민간 혹은 준공기업의 자연적 독점시장으로 손 바뀜: 방송, 통신, 전기, 가스 등
 - 다국적 기업들의 기간산업 지배
- 정부 존재의 쇠락
 - 국가 부도 빈도 증가: 아일랜드, 그리스 등
 - 정부 만큼 큰 기업들의 출현
 - 2011년 기준 한국 세출 1300조원 vs 월마트 매출 440조원
 - 정부 보다 큰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
 - 정부의 격차해소 능력 점진적 소멸
 - 실질적 분배 악화
 - 개인의 지적 물적 재산권 보호 미흡

New normal: 2 – speed World

- 경제성장률
 - 저성장국가 (1-4%): 유럽, 북미, 일본 등 선진국
 - 고성장국가 (8-12%):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

<표> 세계 경제성장률 (2000-)

단위: %

	200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세계	3.2	1.5	-2.3	4.0	3.0	3.2
선진국	2.6	0.1	-3.7	3.0	1.6	1.9
개발도상국	6.5	6.0	2.0	7.3	6.4	6.0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2011

New normal: 2 – speed World

- 소득증가율
 - 높은 소득증가율: 고소득층
 - 풍부한 자본, 정보, 기회 등
 - 낮은 소득증가율: 저소득층
 - 빈곤의 고착화
- 기업성장율
 - 대기업: 대마불사
 - 중소기업: 잦은 진출입
- 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국민적 관심과 선호 존재
 - 차이의 불인정
 - Make and Mend의 부재

New Normal: 양극화

- 가계소득의 하락
 - 2012년 현재 가계소득은 국민총소득의 62.3%임.
 - 가계소득증가율은 1980년대 연평균 16.9%, 1990년대 13.0%, 2000년대 5.9%로 감소추세
- 가계소득 하락의 원인
 - 경제성장률의 하락/ 피용자 보수증가율 하락
 -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유입 약화/ 고용유발계수 하락
 - 자영업자의 증가와 낮은 수익성
 - 이자소득의 감소/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상승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New Normal: 양극화

- 소득양극화
 - 소득 격차의 요인은 근로소득의 격차에 기인함 (70% 이상).
 - 투기에 의한 소득양극화 아님.
 - 해외소득은 분배에 의한 것이 아님.
- 임금양극화
 - 노동조합, 정규직, 연봉제를 통한 Rent seeking
- 건강양극화
 - 고소득층이 의료와 건강 독점
 - 본인부담금의 최대수혜자는 고소득층
 - 저소득층의 질병위험
 - 스스로의 관리 부족 가능성
 - 개인적 중독
 - 낮은 교육수준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New Normal: 양극화

- 교육 양극화
 - 공교육의 한계
 - 공교육의 질 저하
 - 사교육 증가와 고액화
- 사회적 기회의 양극화
 - 고소득층/학벌/지연의 이해집단화
 - 보이지 않는 차별
 - 사회적 배제
 - 일자리 대물림 등
- 수도권 집중
- 남북한 격차

New Normal: 양극화

- 주거양극화
 - Imputed income을 고려한 주거비는 전체 소득의 20-30%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세 소멸
 -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수명 단축, 아파트 질 저하
 - 전세절멸론에 대비하여 주택거래 활성화 및 다주택보유책 필요함.
- 양극화 시스템
 - 리먼사태(2008)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구조조정과 제조업 르네상스), 독일, 중국
 - 최대 피해자는 PIGS와 BRICs
 - 월가점령 운동과 1:99
 - QE혜택의 40%가 상위 5%로 감 (영란은행 보고서)
 - 성장 종말론 (Robert Gordon), 기술개발 둔화론

자본주의 5.0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 사회경제적 변화
 - “빈곤층도 변한다”: Dynamic Policy Approach
 - 사회경제적 심리적 정치적 구조의 변화
 - 중산층 심리의 부재
 - 복지서비스(교육, 의료, 주거 등)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 요구
 - 고령화
 - 여성의 사회참여
- 복지, 고용, 생산의 통합화
 - “고용 없이 복지 없다”
 - “복지도 산업이다”
 - 정부기구의 역할 조정 필요
 - Why? : “Government is poor”
- 저렴하고 철저한 사회안전망
 - Social Inclusion
 - 기회(재도전)의 보장
 - 사회보장제도의 혁신(innovation)
 - 사회보장은 노동집약산업 아님: 로봇, IT, BT, NT 결합가능
- 빈곤층 문제는 미시미시 (micro-micro) 문제임
 - 예방 및 결과 중심의 섬세한 접근: 정책평가 방법의 개선

Ⅲ. 자본주의 5.0의 개념

자본주의 5.0

- 자본주의 5.0
 - 나눔테크놀러지의 사회 (2013-)
 - 나눔을 주는 자의 기술: 누구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
 - 아무리 주어도 고마와 하지 않는 나눔
 - 나눔을 받는 자의 기술: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받아야 (요구해야)하나? - 아무리 받아도 모자란 나눔
 - 기업의 나눔테크놀러지
 - 이윤의 배분
 - 왜 비정규직은 저소득층인가?
 - 연봉제 vs 성과제
 - 나눔테크놀러지의 부족
 - 한국 vs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나주는자에 대한 존경)

자본주의 5.0

- 복지테크놀러지
 - 복지를 권리에서 책임으로
 - 복지의 효율화
 - 복지 단가의 절감: 생산기술의 개선
 - 자본주의도 “효율성(Efficiency)” 이고 “정의(Justice)”다
 - 자본주의도 자성의 “정신개혁”이 필요하다.
- ➡ “자본주의는 죽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시스템이다.” : A. Kaletsky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자본주의 5.0: 나눔테크놀러지의 개념

- 기부 vs 나눔
 - 기부 (giving)
 - 기부는 단순히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임.
 -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교감이 없음.
 - 나눔 (sharing)
 - 나눔은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함
 - IT 및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마이클 센델의 “정의”와 유사한 개념임.
 - 우리사회에는 나눔은 없고 기부만 있다고 봄.
- 자선 vs 박애(博愛, Philanthropism)
 - 자선: 가난한 사람을 도움
 - 박애: 온 인류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함.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자본주의 5.0: 나눔테크놀러지의 개념

- “You cannot strengthen the weak by weakening the strong” A. Lincoln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현대 자본주의의 한계

- “자본주의 하에서의 새로운 차별과 배제가 자본주의를 파국으로 이끌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 (Slavoj Zizec)
- “다리의 수송력은 여러 교각이 지닌 힘의 평균값이 아니라 가장 약한 교각의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 (평균화의 맹점)” 지그문트 바우만 (Zygmunt Bauman)
- 자본주의 4.0의 역할
 - “더 큰 정부는 바로 더 작은 정부를 뜻한다” **자본주의4.0**
 -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 기업도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 나눔테크놀러지가 필요함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IV. 'New Normal'의 현황과 한계

주요국 국민부담율과 조세부담율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24.0	25.1	26.5	26.5	25.5	25.1	25.9
	18.9	19.7	21.0	20.7	19.7	19.3	19.8
미국	27.1	27.9	27.9	26.3	24.2	24.8	25.1
	20.5	21.3	21.4	19.7	17.7	18.5	19.4
프랑스	44.1	44.4	43.7	43.5	42.5	42.9	44.2
	27.8	28.0	27.5	27.3	25.8	26.3	27.5
독일	35.0	35.7	36.1	36.5	37.3	36.1	37.1
	21.0	22.0	22.9	23.1	22.9	22.0	22.8
일본	27.3	28.1	28.5	28.5	27.0	27.6	-
	17.2	17.8	18.1	17.4	15.9	16.3	-
OECD	34.9	35	35.1	34.5	33.7	33.8	-
	26.1	26.3	26.3	25.6	24.5	24.6	-

주: 상단은 국민부담율, 하단은 조세부담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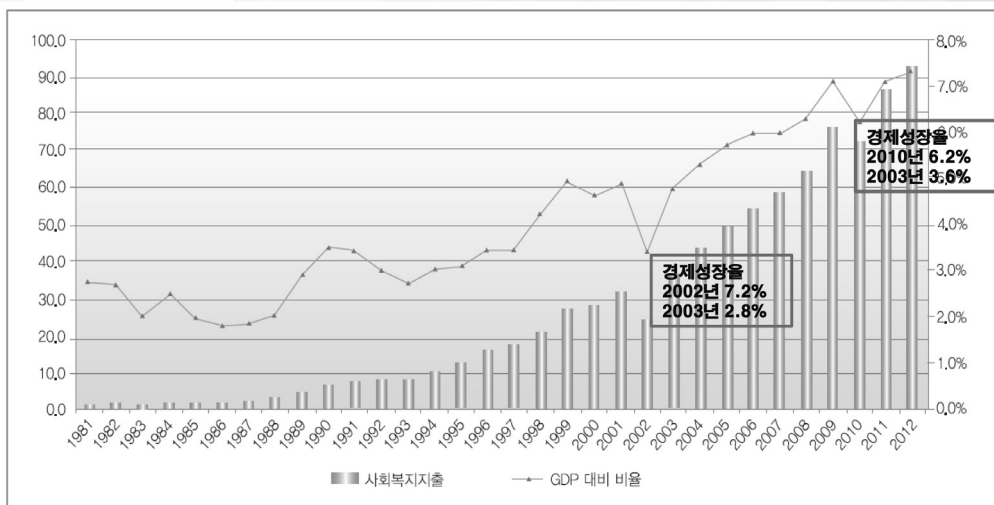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OECD

- 국민부담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이는 낮음. 그러나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로 국민부담율은 상당기간 상승할 것임.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중앙정부 복지지출추이



주: 2011, 2012년 GDP는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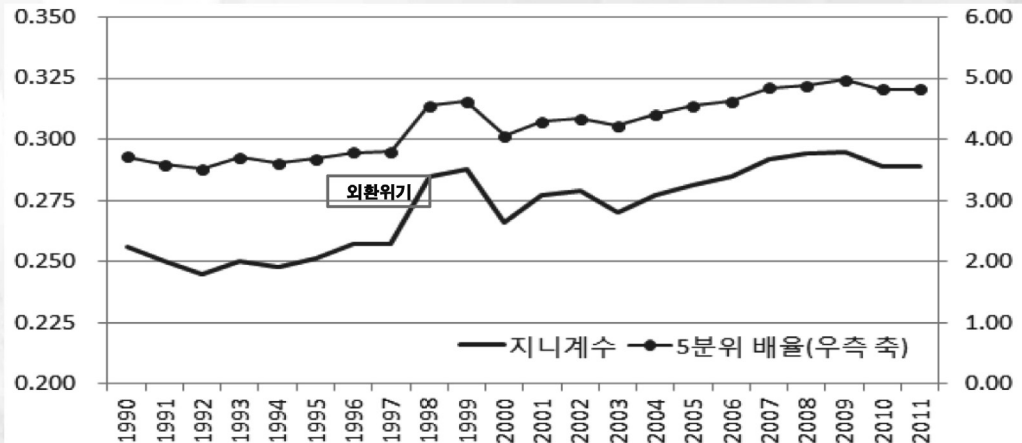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재정운용계획, 국가통계포털(<http://kosis.go.kr>)

- 복지지출은 상당히 급속히 증가해 왔음.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소득불평등도 및 양극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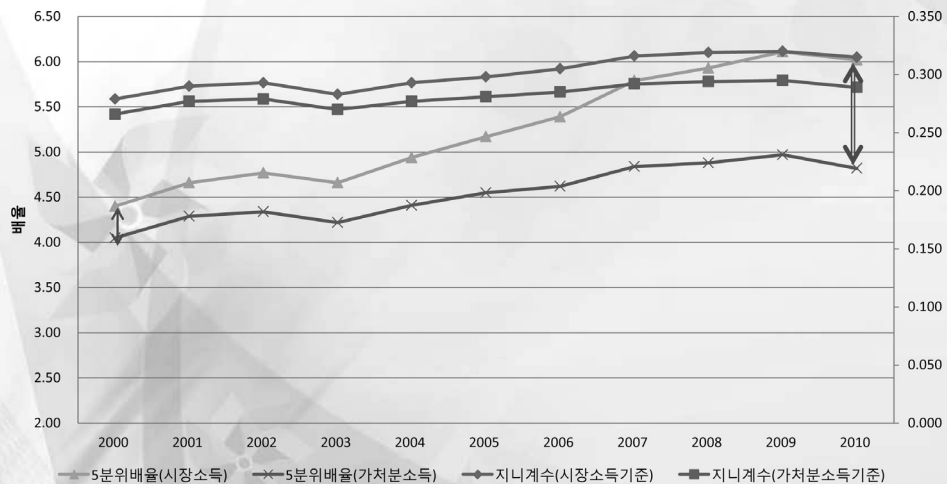
주: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 소득기준
자료: 통계청

-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소득재분배 추이



자료: 통계청

- 5분위율의 변화는 소득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임
- 복지정책보다 소득(고용)정책이 더 효과적임.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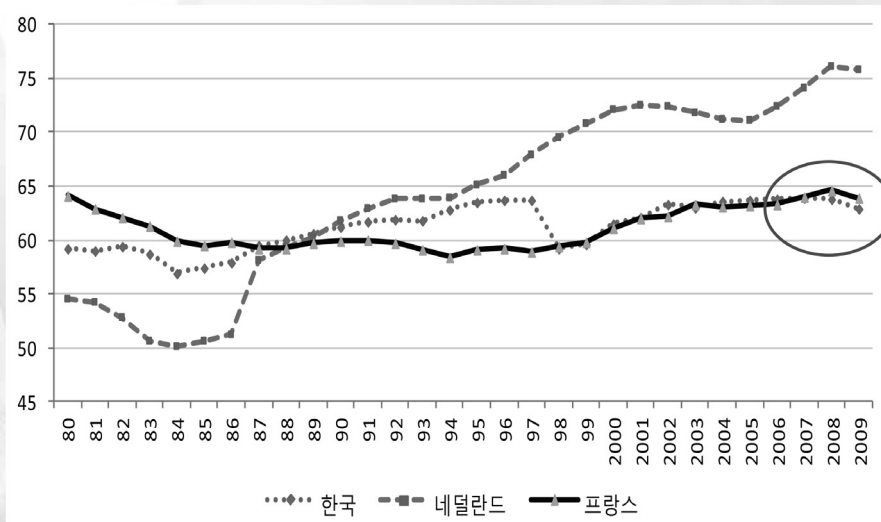
소득분위 간 사회보장제도 적용가구 분포(2010)

제도	구간	기초 수급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 위	전체
사회 보험	공적연금	7.58	8.13	14.75	34.03	58.78	74.56	84.83	89.78	94.15	95.03	96.11	65.04
	고용보험	5.52	0.29	2.17	12.69	29.23	41.59	51.58	57.35	65.74	69.94	64.04	39.47
	건강보험	5.84	58.95	89.80	93.06	97.32	99.14	99.67	100.0	99.78	99.93	99.46	93.72
기초생활보장급여		98.34	41.61	12.07	9.37	4.17	1.28	0.66	0.80	0.61	0.20	0.00	7.07
장애수당		32.79	14.78	4.82	2.06	0.97	0.46	0.25	0.22	0.45	0.20	0.00	2.42
경로연금		44.42	26.72	7.03	2.75	1.01	0.64	0.67	0.51	0.00	0.35	0.56	4.02
모부자가정수당		0.30	0.09	0.17	0.22	0.51	0.00	0.00	0.00	0.00	0.00	0.00	0.10
영유아보육료지원		5.59	2.75	3.18	4.70	8.83	13.17	12.10	10.12	5.81	1.44	2.19	6.43
학비지원		20.77	3.98	3.87	7.90	4.96	3.63	2.13	1.52	1.96	1.11	0.55	3.17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고용률의 연도별 추이: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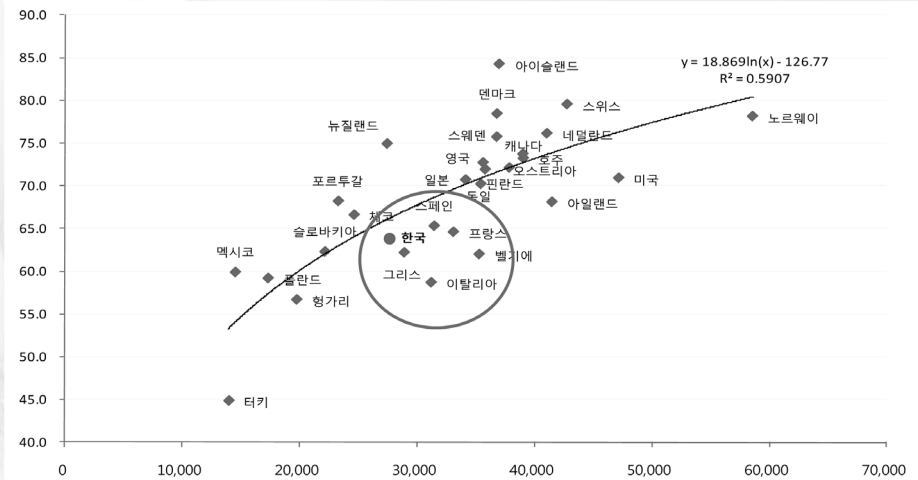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정체되고 있음.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국민소득과 고용률(2008)



- 향후 성장과 고용이 함께 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 필요함.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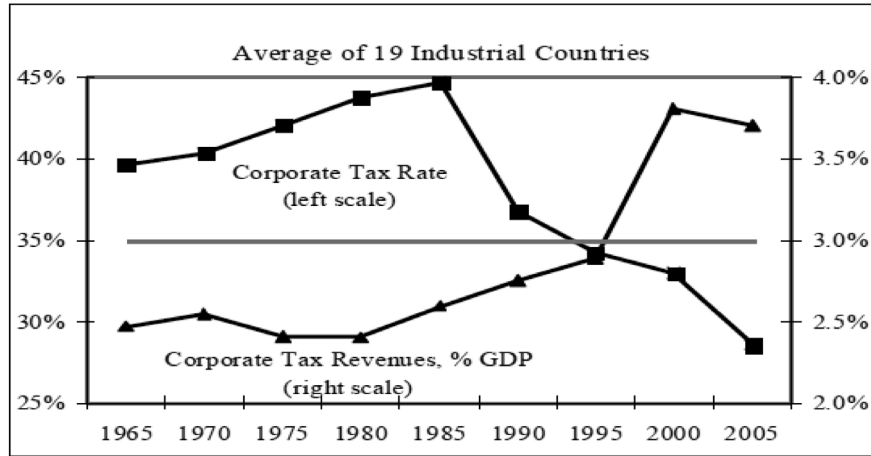
노동시장의 문제점

- 경제성장 잠재력의 하락
 - 노동시장의 경직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
- 고용없는 성장
 - 서비스산업의 낮은 고용창출
 - IT화
 - 내수산업 취약
 - 글로벌 아웃소싱 등
- 노동시장 양극화
 - 중산층 감소
 - 소득분배 악화
- 고용불안
 - 1998-2007년간 임금근로자의 평균근로기간: 4.2년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법인세와 세수



Source: Author, based on data for 19 OECD countries. See endnote 2.

출처: Chris Edwards, "Corporate Tax Laffer Curve," Tax & Budget, No.49, Cato Institute, Nov. 2007.

- 법인세 감소는 창업을 포함한 기업활동을 높여서 세수를 증대시킴.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V. 나눔테크놀러지의 방향: 생산과 복지의 일체

자본주의 5.0

- 우리사회의 나눔 과제
 - 성장과 복지
 - 세대간 갈등
 - 1:99
 - 갑과을
 - 부자정규직 vs 비정규직
- 우리사회의 나눔 정책들
 - 경제민주화: 내부자거래의 제한, 일감나누기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지정 및 비자발적 기부
 - 부유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시장의 왜곡
 - 보편적 복지: 필수 복지수혜자의 구축
 -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업종의 선정에 따른 부작용
 - 의료보장: 저소득층 의료접근도 개선 및 건강상태의 개선 미진
 - 최저임금법: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이탈
- 나눔정책의 평가: 나눔이 기회의 나눔으로 이어져서 사회적 순환을 가능하게 했나?

자본주의 5.0

- 나눔의 기술: 나눔의 주체와 주체의 성격
 - 정당: 유권자 극대화
 - 시민단체: 이익/ 정치적 영향력 극대화
 - 여론: 사회적 영향력 극대화
 - 노조: 임금(보상) 극대화
 - 기업: 이윤 극대화
 - 개인: 혜택 극대화
- 정부의 나눔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 기회의 형평성
 - 분배정책의 필터링효과(정화효과) 제고
 - 고소득자(생산부문)의 지출 없이 저소득자(서비스부문)의 소득 개선 불가: 승수효과
 - 선택적 복지: 예산 절감 및 효율화
 - 복지 대상의 조정과 확대: 근로유인 제고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자본주의 5.0: 분야별 나눔의 이슈들

- 산업
 - 사유재산권
 - 불공정거래
 - 특권/ 기득권
- 노동
 - 연령/ 남녀/ 장애인 차별금지
 - 비정규직 차별금지
 - 이윤배분
 - 노동의 On-line exchange
 - 지역간 경쟁
 - Strike free
 - Regulation free
 - Crime free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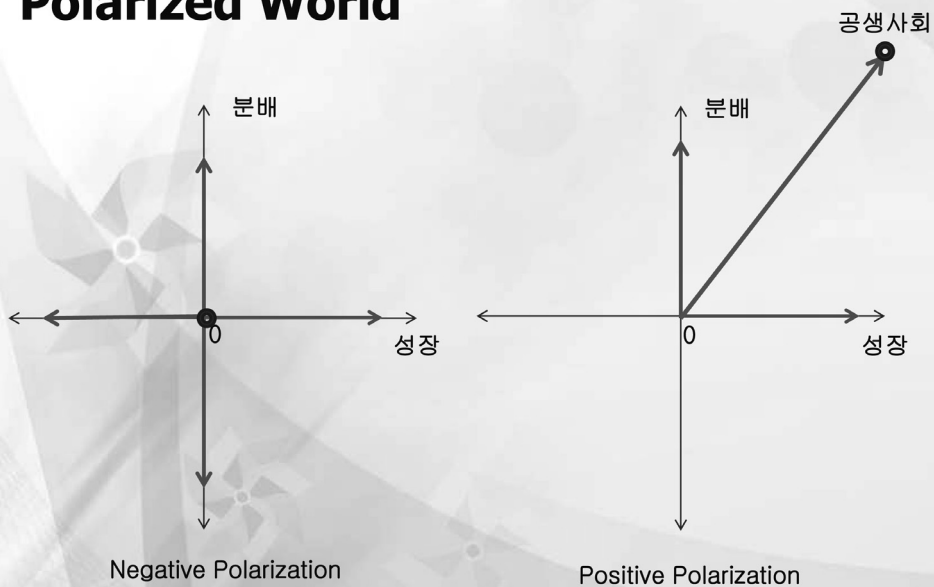
자본주의 5.0: 분야별 나눔의 이슈들

- 의료
 - 원격진료
 - 지역간 의료기관의 편중
 - 빈곤층의 의료접근도
- 교육
 - 원격 교육
 - 대학의 수도권 집중
 - 빈곤층의 교육기회 보장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Polarized World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정부가 왜 복지를?

- 시장경제
 - 정부가 아닌 시장을 통한 경제성장
- 시장경제의 한계
 - 형평성 혹은 빈곤의 문제 해결 불가능
 - 시장의 독점화로 시장 황폐화
- 정부의 역할
 - 복지를 통한 재분배
 - 복지정책
 - 복지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장관리
 - 경제정책
 - 사회정책
 -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위한 population engineering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성장(경제)과 분배(복지)의 관계 설정: 공생적 발전

-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제도
 -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
- 예방중심의 사회보험제도: ~~병 주고 약주는 사회~~
 - 가입자 중심의 보험료로 조달
- 다층 사회보장제도: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 정부 vs 기업 vs 개인 vs 종교 및 시민단체 vs 봉사
 - 중앙정부 vs 자치단체 vs 지역공동체(communitiy)
- 복지제도의 사회적 개혁 (social innovation)
 - 복지제도의 지배구조 개혁
 - 복지부분에 대한 신기술 신경영 도입 및 투자 활성화: 서비스 공급 중심
- 국민들의 사회적 책임의식 고양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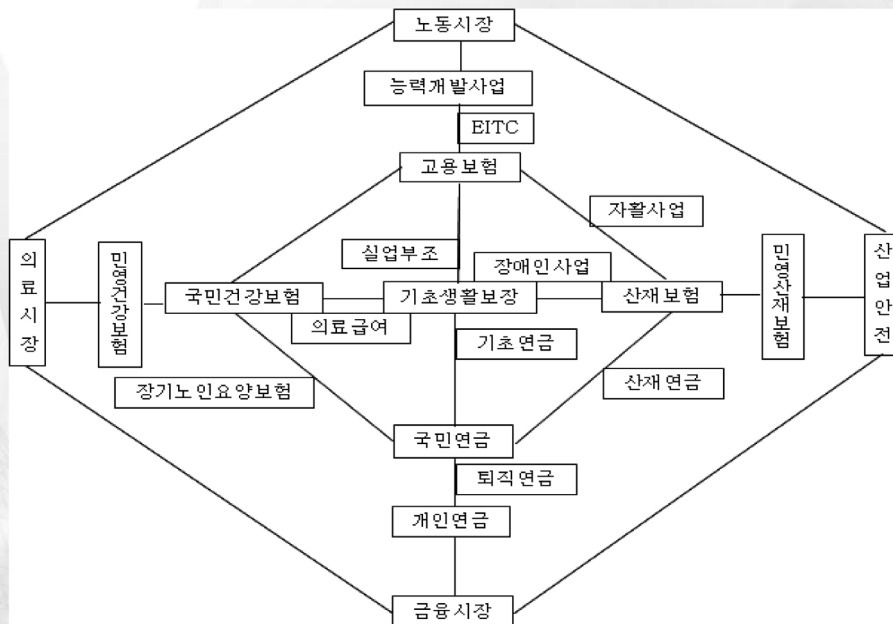
1차배분과 2차배분의 테크놀러지

- 기업의 기업복지 활성화: 기업복지는 '제5의 사회보험'
 - 근로자가 자산이며 생산의 원동력
- 정보기술, 로봇, 생체공학 등을 성장 뿐 아니라 나눔을 위하여 활용
 - 청년층의 고용 증대를 위하여 정보기술을 교육 훈련 활용
 - 고령자 고용을 위한 로봇시스템 도입 및 도움로봇 활용
 - 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과학적 관리
 - 노화 억제를 위한 생체공학기술 보급
 - Big data의 활용을 통한 복지시스템 개혁 등
- 복지부문에서 정부의 목표지향형 기술개발과 시스템개혁 필요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복지네트워크 모델: 복지와 경제 (1)



근로빈곤층 지원 모델 개발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복지네트웍 모델: 복지와 경제 (2)

- 소득보장축
 - 안정적 고용
 - 소득의 원천이면서 노후소득의 원천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연금 활성화
- 의료보장축
 -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 건강관리의 개선
 - 산업안전의 제고
 - 재활 및 장애인 보호

근로빈곤층 지원 모델 개발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COHESION

복지네트웍 모델: 복지와 경제 (3)

- 외곽마름모
 - 산업네트웍: 금융, 의료, 노동, 산업안전
- 외곽과 내부의 중간
 - 민간 사회안전망: 민간건강보험, 민간연금, 민간산재보험, 능력개발
- 내부마름모
 - 공공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노인
요양보험
- 내부마름모와 중심
 - 사회서비스: 의료급여, 실업부조, 장애인 서비스 등
- 중심
 -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빈곤층 지원 모델 개발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COHESION

복지네트워크 모델: 복지와 경제 (4)

- 공공부문 vs 민간참여 vs 자발적기여
 - 공공부문
 - 무상 공급자로서 정부의 관료화 및 정부의 실패
 - 복지 부문의 낮은 생산성
 - 민간 참여
 -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기술 개발을 통한 복지 효율화
 - 신복지 기술의 범사회적 확산 및 투자
 - 자발적 기여
 - 종교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

근로빈곤층 지원 모델 개발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의 정책방향

- 사회적 위험의 억제와 빈곤층 자립능력의 제고
 - 중산층 육성
 - "가족 시스템"의 부활
 - 기업도 가족
-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대한 양적 질적 공급
 - 서비스 공급자의 다원화: 공공, 민간, 사회 종교단체, 자원봉사 등
 - 금융산업 및 의료산업의 활성화
-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성, 신뢰제고
 - 민영화/ 영리/ 신기업경영방식 도입
- 안정적 고령사회의 진입
 - 인생 3모작 사회 시스템 구축
- 통일에 대비한 복지제도 및 복지공급 시스템의 구축

자본주의 5.0: 나눔기술경제

한선정책연구원

Ⅵ. 결론

선진 복지정책의 오류

- 여성은 가사만 담당할 것으로 가정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 개인소득은 근로소득 중심이라고 가정
 - 근로자의 자본시장 참여
- 복지제도를 통한 계층간 이전에 대한 무관심 가정
 - 안정된 사회를 위하여 기회보장은 필수
- 지속적 인구증가 가정
 - 출산율하락으로 인구 정체
- 평균수명의 정체 가정
 - 의료제도 및 건강관리로 100세 사회로
 - 노인의료비 급증

자본주의 5.0 무엇을 해야 하나?

-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함.
 - 양극화는 복지로 해결할 수 없음.
- 거시적 양극화 해소에서 부문별 양극화 해소: 양극화는 fallacy of composition으로 해결되지 않음.
 - 복지
 - 보건/의료
 - 노동
 - 국가간
 - 남북한간
- 기업복지의 활성화: 1차적 배분의 효율화
- Leader와 follower의 구별없는 전체구성원의 참여
- 힘의 논리에서 합리성/국제적 기준 으로
- 기회의 형평성이 합리적 복지시스템의 판단 기준
- 다차원적 자본 확대와 축적
 -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유재산권의 보호

자본주의 5.0 : 의료 복지시대의 대한민국 의료

박종훈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목차〉

- I. 과거 의료의 문제
- II. 현재의 문제점
- III. 대한민국 의료기관 안전사고 추정치
- IV. 쟁점
- V. 제안

복지와 의료는 우리사회 모든 분야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진화 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사 중 보건과 의료는 당연히 우선이기 때문이다. 과거 대한민국의 의료의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이 대개 그렇듯이 시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 수준의 낙후, 의료 혜택의 불균형 등 실질적인 의료의 절대적으로 후진적이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의 보장성 문제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는 예방의학적 사업이 절실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의료 문제는 무엇일까? 의료 기관의 시설과 치료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개선되었다. 전 국민 의료 보험 시대를 맞아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의료 혜택의 균등성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환자 및 의료인의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의료 기관 간의 양극화 현상은 우려할 수준으로 심화되었으며 이상하게도 정부의 급여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비의 상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상승하고 정부의 급여 확대는 중증질환 전면 보장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은 대한

민국의료의 공공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의료인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의료기관 간의 경쟁은 건설적이지 않은 과잉 투자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다시 왜곡된 의료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 수준과 시설은 선진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 사회가 돌아보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 바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의료 사고를 비롯해서 후진적인 간병제도 등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건 의료 정책의 토론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의료를 논의함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공급자중심적인 사고로 들여다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로는 환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환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할까? 보장성 확대, 공공성 확대, 의료비 상승과 같은 단편적인 문제 보다는 무엇이 지향해야 할 좋은 의료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좋은 의료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없다보니 국민들은 좋은 의료를 찾아서 헤매고 정부 정책은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결정되곤 한다. 이상적인 의료 환경을 지향함에 있어서 그것이 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좌냐 우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환자 중심의 의료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즉 의료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것이다.

I. 과거 의료의 문제

- 전반적인 의료 시설 및 기술적 수준의 낙후
- 의료 혜택의 불균형 - 지역, 경제 여건에 따른 격차. 의료 혜택의 벽이 높음
- 보건 예방 사업이 우선

II. 현재의 문제점

-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 -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폭증하는 의료비.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
- 모든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통제 불능의 병상 규모 경쟁 - 의료 기관의 부실화
- 전반적인 의료 수준은 높아졌으나 개선되지 않는 의료 사고
- 통제가 어려운 검증되지 않은 의료의 난맥상
- 정부와 끊임없이 대치 중인 의료계
- 공공성 부족? - 공공 의료 기관의 확충과 상급 병실료 폐지,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
-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좋은 의료인지에 대한 담론이 없어서 지향해야 할 의료의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출발. 이는 의료제도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지 않고 그 때 그 때 마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에 기인함. 즉 정부 정책의 실패가 현재의 왜곡된 의료제도를 만들었음. 사회주의 의료도 아니고 시장 중심형의 미국식 제도도 아닌 이상한 형태임. 정부와 시민단체는 사회주의형을 지향하고 의료계는 미국식 시장 중심형 제도를 선호하고 국민은 돈을 지불할 때는 사회주의형을, 혜택은 미국식 제도를 선호하는 뒤죽박죽임. 좋게 말해서 혼합형이고 솔직히 말하면 엉망형
-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의 합의점이 필요.



현재의 수가 수준으로 이러한 병원 운영이 가능할까? 암 치료에 왜 이런 호화판 병원이 필요할까?



경영을 위한 과도한 최첨단 경쟁



병원은 첨단화, 고급화 되었으나 환자와 가족의 여건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간병은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무관심 속에 학대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의료기관의 글로벌화를 주장하거나 엄중한 감염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다.

Ⅲ. 대한민국 의료기관 안전사고 추정치

입원건수(2009년): 5,357,401건

AE 사망 환자수 추정치

- 연간 36,473명[11,583, 94,333]
- 예방가능 사망환자수: 15,866명[4,564, 46,789]

2009년 사망자수

- 신생물(C00-D48): 70,779명
- 순환기계통의 질환(I00-I99): 54,257명
- 교통사고(V01-V99): 7,147명

[출처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지원방안_환자안전의 국내외 동향]

Ⅳ. 쟁점

- 강력한 정부 주도의 정책이 의료 환경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 시장주의로 흘러왔었다.
- 자유 시장 정책을 원칙으로 한 것 보다 못한 왜곡된 시장으로 진화했으며 통제가 안 된다. 현재는 더욱더 강력한 통제형인 사회주의적 의료를 지향할 것이냐 (정부와 진보주의자들의 공통된 목표) 아니면 차라리 자유 시장 중심으로 갈 것인가(의료계의 기로에 놓여있다).
- 정치적으로 무척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미국식 자유 시장주의에는 과도한 의료비라는 문제가 있고 유럽식 사회주의 모델은 우리 환자들이 참아주기 어려운 지루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극단의 선택이 아니라 양쪽의 장점을 살리는 하이브리드형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자본주의 4.0 에서 주장을 하듯..
- 제도는 있으나 정책은 없다는 인식이 팽배
 - 정책의 탄생 과정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은 배제
 - 한 해 의사 40명 배출하는 대학에 매년 150명이 필요한 병원을 허가.
 - 공공의료를 지향한다면서 기업형 병원의 진출에 대한 일체의 고민도 없었다. 왜곡된 의료환경의 시작
- 여전히 의료의 주체인 의료계는 정책 선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V. 제안

이념을 떠나서 무엇이 옳은 의료인지를 정립해야 함.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4.0 에서 지적하듯 진화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자본주의 5.0 과 같은)이 요구된다. 이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

1. 의료 사고가 없는 의료

2. 고 비용의 의료환경 개선: 현실적이지 못한 저 수가 정책의 전면 재검토

의료 전달 체계를 명확히 확립

일방적인 정부 주도형 의료정책을 탈피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3.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정착

4. 현장 중심의 한국형, 선진국형 의료 정책 수립이 절실. 정치적 관점은 가급적 배제.

자본주의 5.0 : 보건

신의철 교수 (가톨릭대, 보건학)

자본주의 5.0 : 복지와 연금

복지와 나눔테크놀로지

최 군 교수 (한림대)

김원식 교수 (건국대)

〈목차〉

I. 개관

II. 빈곤정책과 활성화

III. 기초연금의 개선

III-1. 기초연금의 개요

III-2. 기초연금의 재정추계 비교

III-3. 기초연금의 문제점

III-4. 기초연금의 방향

IV.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대

IV-1.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대

IV-2.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효과

IV-3. 사회서비스의 확대 방안

I. 개관

□ 소득불평등 분배와 빈곤의 고착화 현상 심화, 인구의 고령화, 생활상의 곤란으로 인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확대 등 복지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최근 복지확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는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킴.

□ 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배분, 복지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은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

Ⅱ. 빈곤정책과 활성화

□ 빈곤층의 구조가 종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현행 빈곤정책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로가능계층에 대한 근로유인 강화, 복지와 고용의 연계 강화, 개별급여제도 정착,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모색,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급여기간 상한제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

Ⅲ. 기초연금의 개선

□ 연금총액조사를 통해 공제액을 결정하여 기초연금 지급, 바우처지급의 선택권 보장, 하위소득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초연금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함.

Ⅳ.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대

□ 저출산, 고령화, 가족 위기, 고용불안정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산업은 한계계층 대상 신규 일자리창출과 여성노동력 흡수와 관련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

□ 현행 사회서비스가 지닌 영세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바우처(Voucher)사업의 확대, 대상별 맞춤형 사회서비스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I. 개관

- 복지환경의 변화
 - 소득불평등 분배와 빈곤의 고착화 현상 심화
 - 인구고령화 : 노인빈곤 증대, 노인돌봄서비스 욕구 증가
 - 생활상의 곤란 :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확대
- 복지 확대와 재정부담 증가
 - 기초연금 및 사회서비스 등 확대
 - 자원 확보의 어려움과 증세 논란
 -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문제 제기
-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
 - 권리와 책임의 균형
 - 정부와 민간(시장)의 역할 재배분
 - 복지의 효과성 · 효율성 제고

II. 빈곤정책과 활성화

- 빈곤층의 구조 변화
 - 소득분배 양극화와 중산층 감소
 - 근로빈곤층의 확대 : 사회적 배제 확대
 - 중산층 심리의 빈곤화
- 빈곤정책의 '빈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 한계계층의 광범위한 분포, 사각지대 잔존
 - 복지 · 고용의 연계 미흡
: 노인일자리사업과 자활사업 등
 - 탈빈곤 정책효과 미약

□ 개선방안

- 근로가능계층과 근로불능계층으로 정책대상의 구분
필요 : 근로가능계층에게 근로 유인 강화
- 복지와 고용의 연계 강화 : 활성화 추진
: 근로빈곤 친화적 사회안전망 구축
: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 확대
- 개별급여제도 정착과 공공부조 적용대상 점진 확대
- 다양한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모색 : 사례관리 강화
- 복지의존도를 높이거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자활촉진 위한 급여기간 상한제 도입 등

Ⅲ. 기초연금의 개선

- 기초연금의 도입은 2007년 국민연금의 개혁과정에서 급여수준을 40년 기준 60%에서 40%로 인하하는 과정에서 노후생계 보장을 위해 도입
- OECD 기준 노인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최하위인 45% 수준
 -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연금수급율이 낮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자산(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음
노인들의 자산보유 상태 등은 고려할 경우 빈곤체감도는 낮아질 것임
 - 만일 노인빈곤율이 45%라면 소득에 따라 노인의 45%를 기초연금의 대상으로 해야 함
- 고령자들의 자산을 유동화하여 연금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선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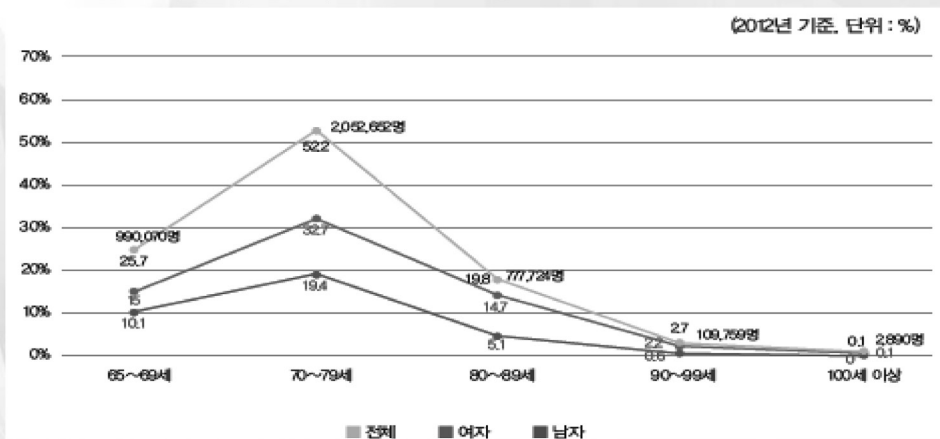
Ⅲ-1. 기초연금의 개요

<표> 연금액별 수급자 현황

구분	계	전액연금 수급	감액연금수급자수					평균연금액
			소계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2008년	2,897,649	2,677,106	220,543	26,843	68,129	62,932	62,599	75,889
비율	100	92.4	7.6	0.9	2.4	2.2	2.2	
2009년	3,630,147	3,569,286	60,861	11,172	20,089	15,698	13,902	80,781
비율	100	98.3	1.7	0.3	0.6	0.4	0.4	
2010년	3,727,940	3,674,984	52,956	7,829	18,127	15,185	11,815	82,722
비율	100	98.6	1.4	0.2	0.5	0.4	0.3	
2011년	3,818,186	3,763,020	55,166	6,650	19,164	15,089	14,263	83,731
비율	100	98.6	1.4	0.2	0.5	0.4	0.4	
2012년	3,933,095	3,872,890	60,205	8,187	21,499	17,110	13,409	86,741
비율	100	98.5	1.5	0.2	0.5	0.4	0.3	

- 2012년 현재 거의 모든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전액을 수급 받고 있음. 기초노령 연금의 감액은 선정기준액을 중심으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함.

□ 성별 연령별 수급자 분포 현황



- 수급자의 연령분포로 볼 때 노인들의 빈곤은 70세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임.

□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표> 가구별 선정기준액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단독가구	400,000	680,000	700,000	740,000	780,000
부부가구	640,000	1,088,000	1,120,000	1,184,000	1,248,000
증가율(%)	-	-	2.9	5.7	5.4

□ 인수위원회안

대상자	급여액				
100%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소득하위 70%		소득상위 30%	
		국민연금 수급자	무연금 자	국민연 금수급 자	무연 금자
	10년 가입	14만원	20만원	4만원	4만원
	20년 가입	16만원		6만원	
	30년 가입	18만원		8만원	
	40년 가입	20만원		10만원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권고안

	대상자	급여액	비고
1안	70%	국민연금 A급여에 따라 차등	고소득자 제외 재정적 지속가능성 고려
2안	70%	소득에 따라 차등	
3안	80%	20만원 정액 지급	

□ 기초연금 정부안

- 전체 노인의 70%를 소득조사(소득인정액)으로 지급
- 급여액은 1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가입연도에 따라 최대 20만원지급
 - 연금액 = (20만원 - 2/3 * A급여) + 10만원
 - 수급자수: 20만원 353만명, 15~20만원 20만명, 15~10만원 10만명

<표> 연도별 재정 기초노령연금 전망

연 도	2014~2017				2020	2030	2040
현행 기초노령연금	26.9				13.7	53.6	111.6
	'14	'15	'16	'17			
	5.3	6.1	7.2	8.4			
기초연금 정부안	39.6				17.2	49.3	99.8
	'14	'15	'16	'17			
	7.2	10.2	10.8	11.4			

- 정부안의 지출 증가요인은 노인 수의 증가이고 감소요인은 국민연금수혜자 수와 가입기간 증가에 따름.
 - 장기적으로 감소요인이 커질 것임
 - 1인당 혜택은 장기적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국민연금 급여 산식의 A)의 5% (현재는 월 10만원)에 접근할 것임

Ⅲ-2. 기초연금의 재정추계 비교

- 대안별 재정소요 비교

(단위 : 조원)

구 분	2014~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정부안	39.6	17.2	49.3	99.8
기초노령연금	26.9	13.7	53.6	111.6
70% 20만원	40.7	17.8	53.6	111.6
100% 20만원	57.1	25.5	74.3	157.8

- 2013년도 재정소요액은 21.8조원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 재정과 같아짐
-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감소

Ⅲ-3. 기초연금의 문제점

- 현 정부의 공약은 월 20만원을 모든 노인들에게 보장
 - 월 20만원은 2012년 기준 연금가입자 월평균 임금의 10%로 향후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조세로 조달됨. 따라서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생계비상승율 등 별도의 인상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아닌 가입기간으로 결정됨
 -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함.
 - 전체 급여액에 따라 감액하지 않음으로써 수혜액에 소득역전이 발생
- 감액기준을 소득조사(소득인정액)에 따르지 않은 것의 문제
 - 소득인정액 산출에 국민들의 불신 존재
 - 현재로서는 연금 가입년수조사 보다 소득조사가 더 합리적임

- 고령화 및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요구가 커질 가능성 높음.
- 복지부안에 따른 경우 중앙과 자치단체 간 재정분담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해소 필요함.
 - 국고보조금 비율은 전국 평균 74.5%
 - 최고부담: 강화, 인천, 나주, 정읍, 영천 등 69곳 90%
 - 최저부담: 경기도 과천 등 40%

<표> 국고 차등보조 기준

		노인인구비율		
		14%미만	14-24%미만	20%이상
재정자립도	90% 이상	40% 지원	50% 지원	60% 지원
	80% 이상 ~ 90% 미만	50% 지원	60% 지원	70% 지원
	80% 미만	70% 지원	80% 지원	90% 지원

Ⅲ-4. 기초연금의 방향

- 국민연금액, 퇴직연금액, 개인연금액에 따라 공제액을 결정하여 실질적 연금조사가 되도록 함.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연금화를 위한 세제지원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설정됨. 소득조사를 대신할 수 있음.
 - 연금조사의 해외 유사사례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음
 - 연금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불완전하나마 노인들의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짐으로써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됨.
- 기초연금의 지급에서 바우처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바우처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함.
 - 빈곤 노인들의 욕구를 바우처 지급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급여가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보장이 되도록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65세 이상 수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상위 30%의 예산은 최하위 저소득층노인들에게 배분함.
 - 노인계층 내 소득재분배의 강화
- 상위 3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의 구실로 이어질 수 있음.
 - 추가적 가능성으로 모든 노인들에 대하여 연금조사에 따른 차등 지급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지급하한액을 없앴.

IV.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대

-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 저출산 고령화, 가족위기,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
- 사회서비스의 확대
 - 2004년-2010년의 6년 동안 전체 산업 종사자 규모는 5.6% 증가하였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규모는 95.4% 증가
- 기존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욕구는 증대됨에 따라 제조업 이외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사회 서비스 확대는 신규 고용 창출과 여성 노동력 흡수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

IV-1. 사회서비스의 도입 배경

구 분	서구 국가	한 국
등장배경	국가재정위기	새로운 사회적 위기
정책환경	복지지출 비판 공공 신뢰 저하 전달체계 비효율성	재정 우선순위 전환기 공공 서비스 부족 복지사각지대 존재
정책방향	복지재정 축소 복지서비스 민영화 복지축소/포괄보조	사회적 기반 확충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복지분권과 포괄보조

Ⅳ-2.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효과

- 비공식부문의 돌봄 부담 경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 고용창출 효과
: 취업계수(10억원 생산시 고용창출 인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산업 평균이 12.2명, 사회서비스 분야는 38.1명
-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의 확대
- 바우처사업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 구매 촉진, 다양한 공급자 출현 및 경쟁 유도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수준 제고
- 사회불리현상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사전 예방을 통해 사회통합 및 미래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사회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

Ⅳ-3. 사회서비스의 확대 방안

- 현행 사회서비스의 문제점
 - 저렴한 질 낮은 서비스 양산
 - 세분화된 사회서비스 체계 : 영세성과 비효율성 초래
 - 서비스체계의 복잡성
 -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미흡
- 국가 주도의 사회서비스체계 구축의 한계
 - 권리성의 강조 : 책임성 약화
 -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 정책체감도 개선에는 한계
 -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 개발 부족

□ 바우처(Voucher) 확대

-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 만족도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 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 활성화
- 바우처 방식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과 공급자 간 경쟁 유도
-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화
- 지역사회기반의 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의 적극 활용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체계 내실화

- 영아기 보육체계 확대
- 아동·청소년기에는 학교복지 확대
- 청년기에는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지원 강화
 - 창업 및 취업 알선 지원강화를 통한 자립의지 향상
 - 노동력이 질적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교육, 평생교육 개선
 -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용지원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근로역량 제고

- 대상별 맞춤형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 장년기에는 행복 가족지원 정책 확대
 - 유연근로제도, 가족친화적인 복지·노동인프라 확대
 - 노년기에는 일자리, 재취업, 정년연장제
 -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
 - 장애인 자립생활 강화
 -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장애인연금 인상, 이동권 등 지원 확대

www.hansun.org



공동체 자유주의로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을

“국민과 더불어, 역사와 함께, 세계를 향해”



한반도선진화재단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0번지 총무빌딩 407호
TEL : (02)2275-8391~2 | FAX : (02)2266-2795
www.hansun.org | E-mail : hansun@hansun.org